

납세자보호위원회

제도 안내

납세자보호 위원회

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.

2008년 지방청·세무서에 설치 ⇒ 2014년 법제화 ⇒ 2018년 4월 국세청에 설치

납세자보호 위원회 구성

-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(담당)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·운영됩니다.

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

● 지방청·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

- ①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
- ②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·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
- ③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·범위 확대
- ④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
- 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(고충 민원 등)

※ 납세자는 ① ~ ② 항목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.

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

지방청·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(위 ①~③ 항목)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(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)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세무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 (2018. 9. 3 시행)

-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**위법·부당한 것으로 의결**하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영세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결정을 취소